

〈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 기획의 글

###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

- 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 ..... 김재형  
기업경영에서 법치주의의 확산  
— 외환위기 이후 회사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 ..... 송옥렬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 박 준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 이철수

IMF는 이 땅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은행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해고가 경영합리화라는高尚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과거 아버지들이 정년퇴임 이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젊은 날을 회한(悔恨) 어린 시선으로 돌아보게 해주었던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없애버렸습니다.

위 글은 인기 있는 웹툰 연재물이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미생(未生)』의 작가 윤태호의 “작가의 말” 중 일부분이다(위즈덤하우스, 2012, 5쪽). 작가의 말처럼 1997년 외환위기는 전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은행은 물론 국가마저도 망할 수 있고, 가장(家長) 그리고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는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2012년에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개혁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쳤으며,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고 이와 함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법제의 개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외환위기의 발생과 그 극복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야기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제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5개의 개별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① “IMF 외환위기 이후 입법과 법제의 변화”(정궁식), ② “IMF에 의한 규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 — 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김재형), ③ “企業經營에서 法治主義의 擴散 — 外換危機 이후 會社法の 발전을 중심으로 —”(송옥렬), ④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규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박준), ⑤ “IMF 규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이철수). 이 가운데 총론적 성격인 정궁식의 글은 필자의 사정과 전체 구성에 비추어 수록하지 않았다.

이번에 다룬 주제는 주로 사법(私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분야만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잦은 개정, 공기업민영화와 관련된 법제의 개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법제개혁이 있었다. “첫술에 배부른 법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나머지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기대한다.

이 논문들은 2013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학술대회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정궁식